한·미 FTA체결에 따른 충남농업의 대응방안

신동호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Ⅰ. 서 론

금번 체결된 한·미 FTA는 상품 · 투자 · 서비스 · 경쟁 · 지재권 · 무역구제 · 노동 · 환경 등을 망라하는 포괄적 FTA로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한 · 미 FTA체결은 관세를 인하함으로써 미국시장에서 우리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강화시켜 수출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미국으로부터 수입해 온 재화를 중간재로 투입하는 산업의 경우 재화의 생산비용 절감과 함께 가격하락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반면, 교역장벽의 철폐로 인해 수입이 증가하면 국내 생산재화의 수요를 대체시켜 국내 생산 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 · 미 FTA로 우리 경제는 성장이 촉진될 측면도 있고 동시에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효과를 지역경제 측면에서 살펴보면 국제경쟁력이 높은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경제는 경제규모의 확대와 함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부정적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즉, 한 · 미 FTA의 영향은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지 않으며, 지역경제를 구성하는 산업들의 특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의 경우 한 · 미 FTA체결로 인해 축산, 과수, 곡물, 채소, 특작 등 농업 전 분야의 생산 활동을 위축시킬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관세철폐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미국 농산물이 수입되면, 국내 농산물의 수요를 대체시켜 결국 농가소득의 감소를 야기할 것이다. 충남지역 역시 예외가 아니며, 특히 축산 및 과수산업의 비중이 높아 관련 농가를 중심으로 그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 인식을 토대로 한 · 미 FTA가 충남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충남

농업의 일반현황, 농업구조 및 대미 무역구조 등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농업부문의 주요 협상결과 및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제4장에서는 이를 토대로 지역농업의 발전과제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충남의 농업 현황

1. 일반현황

지역 내 총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충남의 산업구조를 보면 최근 10년간 제조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에 반해, 1차산업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구체적으로 2차산업의 비중은 1995년 28.0%에서 2005년 44.9%로 크게 증가한 반면, 1차산업의 비중은 14.1%에서 8.4%로, 3차산업은 68.5%에서 46.7%로 감소하였다. 아울러 2차산업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12.0%씩 성장한 반면, 1차산업과 3차산업은 각각 1.4%, 4.5%에 성장에 그쳤다.

이처럼 충남의 산업구조가 2, 3차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의 농업기반은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추세이다. 구체적으로 충남의 농가인구는 2000년 538,718명에서 2005년 446,022명으로 연평균 3.7%씩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평균 -3.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또한 경지면적 역시 동 기간 중 연평균 0.8%씩 감소하고 있으며,

〈표 1〉 국내 산업구조 변화

(단위: 백만원, %)

지역	산업구분		1995		2000		2005		연평균 성장률 ('95~'05)
			총부가가치	산업비중	총부가가치	산업비중	총부가가치	산업비중	
전국	총부가가치		438,016,770	100.0	577,970,942	100.0	645,772,047	100.0	4.0
	농림어업	1차산업	22,638,824	5.2	23,750,741	4.6	23,033,401	3.6	0.2
	제 조 업	2차산업	115,433,855	26.4	151,029,545	29.3	203,363,595	31.5	5.8
	서비스업	3차산업	299,944,091	68.5	339,877,770	66.0	419,375,051	64.9	3.4
충남	총부가가치		18,762,587	100.0	28,962,820	100.0	36,209,310	100.0	6.8
	농림어업	1차산업	2,654,037	14.1	3,157,719	12.2	3,049,486	8.4	1.4
	제 조 업	2차산업	5,252,191	28.0	10,081,660	39.1	16,257,793	44.9	12.0
	서비스업	3차산업	10,856,359	57.9	12,543,616	48.7	16,902,031	46.7	4.5

주: 2000년 기준가격

〈표 2〉 충남의 경지면적 및 고령농추이

(단위 : 명, ha, %)

구분		2000년		2005년		연평균증가율('00~'05)	
		전국	충남	전국	충남	전국	충남
농가	인 구 (A)	4,031,065	538,718	3,433,573	446,022	-3.2	-3.7
	65세이상인구(B)	876,009	119,176	999,306	134,670	2.7	2.5
고령농비중(B/A)		21.7	22.1	29.1	30.2	-	-
경지면적		1,888,765	256,838	1,824,039	249,591	-0.7	-0.8

자료 : 통계청

특히 농촌지역이 이미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라는 사실로 고령농이 동 기간 중 연평균 2.5%씩 증가하는데 힘입어 그 비중이 2000년 22.1%에서 2005년 30.2%로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농업부문의 노동생산성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 이유는 농가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농가소득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농가소득은 2001~2005년 기간 중 연평균 8.8%씩 증가하고 있다. 한편, 2005년 현재, 충남의 농가소득은 32,215천원으로 전국평균 30,503천원보다 약 8.9%가량 높은데, 이는 경기, 제주, 경남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충남의 전체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농외소득 29.5%, 이전소득 11.7%, 비경상소득 1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충남농가의 농업소득 비중이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이다.

〈표 3〉 충남 농가소득 현황

(단위: 천원)

구분		농가소득 (a=b+c+d+e)	농업소득(b)		농외소득(c)		이전소득(d)		비경상소득(e)	
		금액	금액	비율(b/a)	금액	비율(c/a)	금액	비율(d/a)	금액	비율(e/a)
2005	충남(A)	33,215	13,239	40.0	9,820	29.5	3,918	11.7	6,238	18.8
	전국(B)	30,503	11,815	38.7	9,884	32.4	4,078	13.4	4,725	15.5
	A/B(%)	108.9	112.0	103.3	99.4	91.0	96.1	87.3	132.0	121.3
2001	충남(A)	23,671	11,453	48.4	7,353	31.1	4,865	20.5	n.a	n.a
	전국(B)	23,906	11,266	47.1	7,829	32.7	4,811	20.1	n.a	n.a
	A/B(%)	99.0	101.7	102.7	93.9	95.1	101.2	101.9	n.a	n.a

자료: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2005년 현재, 품목별 비중이 가장 높은 농업부문은 축산업으로 전국대비 16.8%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곡물 15.4%, 과일 9.9%, 채소 및 특작 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육두수 및 생산량 비중을 감안할 때 일부 품목은 전국적으로도 충남지역이 주산지인 것으로

〈표 4〉 전국 및 충남 농축산물 생산량 및 사육두수 현황

(단위: 두, M/T, Ton)

구 분		전 국	충 남	전국대비 비중(%)
축산	쇠 고 기	1,818,549	236,999	13.0
	돼 지 고 기	8,961,505	1,636,243	18.3
	닭 고 기	109,627,646	18,414,205	16.8
	낙 농	478,865	77,569	16.2
	소 계	120,886,565	20,365,016	16.8
과일	사 과	367,517	38,989	10.6
	배	443,265	105,457	23.8
	포 도	381,436	42,163	11.1
	감 귤	637,961	-	0.0
	복 숭 아	223,701	16,257	7.3
	소 계	2,053,880	202,866	9.9
곡물	대 두	183,338	15,477	8.4
	감 자	178,833	77,246	43.2
	보 리	118,313	1,231	1.0
	맥 주 보 리	74,494	-	0.0
	팥	5,575	263	4.7
	메 밀	2,243	17	0.8
	녹 두	1,482	68	4.6
	옥 수 수	73,470	3,825	5.2
	소 계	637,748	98,127	15.4
채소 및 특작	양 파	1,023,331	15,894	1.6
	고 추	395,293	33,491	8.5
	마 늘	374,980	30,214	8.1
	인 삼	14,561	2,761	19.0
	토 마 토	438,991	72,456	16.5
	딸 기	201,995	49,012	24.3
	땅 콩	6,604	1,097	16.6
	소 계	2,455,755	204,925	8.3

자료: 통계청 및 농림부

나타났는데, 과일 및 특작물의 경우 생산량 기준으로 보면, 딸기, 배는 전국 2위에 해당하며, 고추, 사과, 포도는 전국 4위, 마늘은 전국 5위를 기록하였으며, 돼지와 한우는 사육두수 기준으로 각각 전국 2, 3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들 품목 중 특히, 사과, 배, 포도 등의 과실류와 한우, 돼지 등의 축종은 한·미 FTA 체결로 인해 상당한 피해가 전망됨에 따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2. 대미무역구조

충남 농산물 전체 수출액은 2001년 약 1.2억$에서 2006년 약 1.6억$로 연평균 5.6%씩 증가하는 추세인 가운데, 대미 수출액 역시 동 기간 중 연평균 11.8%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충남 전체농산물 수출액 중에서 대미수출액 비중은 2001년 18.8%에서 2006년 25.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충남의 주요 농산물 수출국임을 가리킨다.

2005년 현재, 주요 농산물 품목별 수출동향을 보면 충남의 전체수출액 103백만$ 중 인삼이 65.5%에 해당하는 67백만$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과일 21백만$(20.0%), 화훼 8백만$(7.5%), 김치 4백만$(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대일 수출액이 전체수출액의 23.3%에 해당하는 24백만$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미국 22백만$(21.8%), 중국 10백만$(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충남의 수출품목은 인삼, 과일, 화훼, 김치 등 특정 품목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출국도 미국, 일본, 중국, 동남아등 소수의 국가에 편중되어 있어 이들 국가의 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는 취약한 수출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수출품목 및 수출국가의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미수출의 경우 대미 전체수출액 22백만$ 중 인삼이 55.8%에 해당하는 13백만$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과일 7백만$(32.1%), 화훼

〈표 5〉 충남 농산물 대미수출 비중 추이

(단위:백만$, %)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연평균증가율('01~'06)
미국(A)	22	20	17	22	32	39	11.8
전체(B)	119	101	84	116	122	156	5.6
A/B(%)	18.8	19.6	20.2	19.2	26.0	25.0	-

자료 : 충남도청 농업정책과

〈표 6〉 충남 주요 농산물의 국가별 품목별 수출실적(2005년)

(단위:천$, %)

구분	일본	미국	중국	동남아시아	기타	합계
채소	1,851	167	0	697	6	2,721
김치	3,645	439	0	70	191	4,345
과일	34	7,191	242	13,128	75	20,670
화훼	1,830	2,103	3,722	69	0	7,724
인삼	16,633	12,508	5,642	31,882	778	67,443
합계	23,993 (23.3%)	22,408 (21.8%)	9,606 (9.3%)	45,846 (44.6%)	1,050 (1.0%)	102,903 (100.0%)

자료: 충남도청 농정과

2백만$(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삼의 경우, 미국은 기존 미국산 화기삼의 가격경쟁력 외에 무공해 청정인삼이나 산양삼 등 새로운 개념의 인삼을 생산하여 공격적 마케팅을 펼치며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어 향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아울러 특정품목에 집중되어 있는 수출품목을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품목으로 다변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품목 발굴 및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축산의 경우 2005년도 충남의 수출실적은 삼계닭 14천$에 그쳐 농산물의 수출 규모와 비교할 때 무시할 만한 수준인데, 이는 축산물의 수출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농산물보다 낮기 때문이며, 이는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이다. 실제로 축산물의 경우 북한(금강산 관광)이나 이라크(파병 군납용)를 제외하고는 수출실적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Ⅲ. 한·미 FTA와 충남 농업경제

1. 지역관점의 주요협상 결과

농업부문의 주요협상 결과를 보면, 우선 쌀 양허제외를 관철하고,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현행관세 유지 및 수입쿼터 제공, 관세철폐 장기화, 계절관세, 세이프 가드 도입 등 품목별 민감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반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쌀 및 관련제품은 어떠한 형태의 추가적인 개방 없이 양허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으며, 민감품목 및 고관세 적용품목은 관세철폐로 인한 국내시장 교란요인을 농산물 세이프 가드를 도입하여 완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등 민감품목과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보리 등 고관세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급증 시 농산물 특별세이프 가드를 적용하고, 아울러 15년 이상의 장기

〈표 7〉 농업부문 한·미 FTA 협상결과

주요업종	품 목	국내 관세율(%)	양 허 내 용
축 산	쇠 고 기	40	15년 관세철폐 및 세이프 가드
	돼지고기(냉장)	25	10년 관세철폐 및 세이프 가드 (냉동육은 2014.1.1자로 철폐)
	닭고기(냉동)	20	12년 관세철폐
과 일	사 과	45	후지 : 20년 관세철폐, 23년간 세이프가드 기타 : 10년 관세철폐
	배	45	아시안 품종 : 20년 관세철폐 기타 : 10년 관세철폐
	포 도	45	수확기 : 17년 철폐 비수확기 : 5년간 철폐
	복 숭 아	45	10년 관세철폐
곡 물	대 두	487	25천톤, 3%
	감 자	304	7~15년 관세철폐 및 세이프 가드
	보 리	5	
	옥 수 수	5	
	쌀		관세철폐 대상 제외
채 소 및 특 작	양 파	50	15년 관세철폐, 18년 세이프 가드
	고 추	50	
	마 늘	50	
	토 마 토	45	종류별 즉시~15년 관세철폐
	딸 기	45	
	인 삼	222.8 ~ 754.3	18년 관세철폐 및 세이프 가드
	참 깨	630	15년 관세철폐 및 세이프 가드
	땅 콩	230.5	

자료: 외교통상부

관세철폐기간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단기적인 피해보다는 중장기적인 구조조정과정이 예상된다. 특히, 미국의 경쟁력이 강한 과일류에 대해서는 계절관세를 도입하거나, 국내에서 주로 생산·소비되는 품종은 관세철폐를 장기화하는 등 다양한 보호장치를 마련하였다.

이처럼 상당수의 주요 품목에 대해 현행관세 유지를 확보 하는 등 당초 예상되었던 것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협상이전에 예측되었던 것 보다는 그 피해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다. 다만, 국내 농산물의 경우 평년의 5%만 과잉 생산되어도

가격폭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일부 농가의 경우 채소류 같은 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때 공급과잉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2. 한·미 FTA체결이 충남 농업에 미치는 영향

한 · 미 FTA체결로 인한 농업피해는 충남지역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지역 내 총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충남의 산업구조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8.4%로 전국 평균인 3.6%보다 약 2.5배가량 높을 뿐만 아니라 농림어업 취업자 비중 역시 전국 평균인 8.1%보다 약 3배나 높은 24.1%에 달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한 · 미 FTA에 따른 충남농업의 피해는 다음과 같다. 생산액 기준으로 그 피해액은 연평균 약 1,02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피해규모가 가장 큰 부문은 축산업으로 생산액 감소규모가 연평균 약 710억에 달하며, 다음으로 과일 약 163억원, 곡물 약 114억, 채소 및 특작 약 34억원 등의 순으로 추정된다. [1)]

연평균 생산액 감소규모를 품목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축산부문 중 쇠고기의 생산액 감소규모가 연평균 약 288억원으로 가장 크며, 돼지고기 약 247억, 닭고기 약 119억, 낙농 약 56억원 등의 순으로 추정된다. 둘째, 과일부문에서는 연평균 사과 약 64억, 배와 포도 약 46억, 복숭아 약 7억원 등의 순으로 생산액 감소가 예상된다. 셋째, 곡물부문에서는 대두의 피해가 가장 커 연평균 약 92억원 가량의 생산액감소가 예상되나, 감자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피해는 경미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채소 및 특작부문에서는 인삼의 생산액 감소가 연평균 약 10억원으로 가장 크며, 딸기 약 8억, 토마토 약 7억원, 고추 약 4억원 등의 순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상의 피해예상규모는 분석에 포함된 모든 품목의 관세철폐기간을 10년으로 가정하고 추정된 결과이므로 실제 농업부문의 한 · 미 FTA 협상결과를 고려하면 실제 피해액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이유는 쇠고기, 감귤, 고추, 마늘, 양파(이상 15년), 인삼(18년), 배, 사과(이상 20년), 포도(17년)등 민감 품목들이 대부분 장기철폐로 타결이 되어 실제 피해액은 상기 결과를 하회할 것이기 때문이다.

1) 농촌경제연구원(2006)은 일반균형연산모형을 토대로 관세철폐시기에 따른 전국농업생산의 연평균 감소액을 추정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동 연구원이 제시한 전국단위의 생산감소액 중 충남지역의 농업품목별 비중(전국대비 사육두수 및 생산량비중)을 고려하여 충남의 생산감소액을 추정함

〈표 8〉 충남 농업의 주요 품목별 생산감소액 추정

(단위: 억원,%)

품목군		연평균 생산감소액	전국대비 충남지역 사육두수 및 생산량 비중(%)
축산	쇠고기	288.5	13.0
	돼지고기	246.9	18.3
	닭고기	118.9	16.8
	낙농	56.4	16.2
	소계	710.7	-
과일	사과	64.2	10.6
	배	46.4	23.8
	포도	45.8	11.1
	감귤	0.0	0.0
	복숭아	7.1	7.3
	소계	163.5	-
곡물	대두	92.0	8.4
	감자	10.8	43.2
	보리	8.0	1.0
	맥주보리	0.0	0.0
	팥	2.9	4.7
	메밀	0.2	0.8
	녹두	0.3	4.6
	옥수수	0.1	5.2
	소계	114.2	-
채소 및 특작	양파	0.3	1.6
	고추	4.4	8.5
	마늘	2.1	8.1
	인삼	10.4	19.0
	토마토	7.1	16.5
	딸기	8.0	24.3
	땅콩	2.2	16.6
	소계	34.5	-
합계		1,022.9	-

Ⅳ. 한·미 FTA체결과 충남 농업·농촌의 대응방안

1. 충남농업의 기본과제

1) 한 · 미 FTA에 대한 이해 증대

한 · 미 FTA가 지역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 전체적으로 공유함으로써 경제주체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한 · 미 FTA로 인한 지역별 · 품목별 영향에 대한 과학적 · 종합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아울러 도내 농업주체들간의 의견을 수렴 및 협의하는 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인들 스스로의 자립을 위한 노력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2) 농업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농업·농촌 종합대책 재검토

농업은 안전한 먹거리, 여가와 휴식의 장 제공, 전통과 문화, 국토환경보전이라는 다면적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환경 생명산업으로서 보전할 가치가 충분하다. 따라서 최고정책 관리자의 관심과 국민의 애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별, 시군별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협의기구 또는 대책반을 마련하여 충남 농가의 피해 최소화 및 구조조정과 관련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3) 내재적 자원에 근거한 지역경쟁력 확보

한 · 미 FTA로 인한 수혜업종이 전자정보 및 자동차산업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동 산업이 집적되어 있는 충남 서북부지역과 상대적으로 농업의 비중이 높은 여타 지역과의 경제력 격차는 가속화 될 전망이다. 따라서 한 · 미 FTA로 인해 지역 내 불균형이 심화될 개연성이 충분하다. 다만, 충남은 지역의 실정과 여건을 감안하여 시 · 군별로 지역특화산업이 선정되어 있고, 이의 육성을 위한 노력이 진행중인데 이는 한 · 미 FTA에 대한 대응방안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즉, 시군별로 내재적 농업 · 농촌자원에 근거한 지역산업정책 수립측면에서 기존의 향토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등을 더욱 활성화시켜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도차원의 낙후지역 배려차원에서 도 조례로 마련된 '충청남도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만하다.

2. 충남 농업·농촌의 대응방안

1) 구조조정 방안

◈ 맞춤형 영농구조 개선

충남 농업·농촌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연적이다. 다만, 농업부문의 구조조정은 우선 개별 농가별로 경영주체, 소득규모, 생산품목 등 구조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구축한 이후, 이를 토대로 농가유형별로 영농형편에 맞추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전업농에 대해서는 영농규모 확대를 지원하되, 은퇴·경작포기·파산신청농가에 대해서는 농지를 인수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농업구조조정을 유도한다.

◈ 경쟁력을 갖춘 지역특화품목의 발굴 및 육성

충남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 특화계수가 높으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작목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해 할 것이다. 지역농업의 핵심 작목을 선정함에 있어 우선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시장수요 및 소비자 선호에 대하여 정밀하게 분석한 후, 지역의 입지조건과 비교우위성을 검토하여 유망작목을 발굴하되, 이를 지역특산물로 한정하지 말고 전국적인 브랜드로 키워나가 농산물 시장 전체를 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충남은 수도권과 대전이라는 거대 소비시장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도시근교농업에 유리하며, 관련 시설 엽근채류 품목을 발굴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 산·학·관·연 연계에 의한 농업 경영체의 지원

농산물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품종개발, 재배기술, 규모화, 시설현대화, 생력화, 수확 후 관리기술, 소비자 지향형 마케팅 전략 등 다양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정부가 부담하기 보다는 산학관연 연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역할 및 기능을 분담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첫째, 규모화와 노동투입비용절감을 위해 농작업의 공동화나 기계화를 추진하는 등 생력화 기술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상품 혁신지원으로 새로운 품종개발, 틈새시장 개척, 고부가가치형 농산물 가공, 수확후 관리기술 등과 관련한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마케팅 혁신 지원으로서 농산물 전자상거래, 생산과 판매를 연계한 수직계열화 방향으로 농업경영구조를 전환해야하며, 끝으로 산업 융복합화 차원에서 농촌관광과 특산품 판매 등을 상호연계하는 6차 산업화를 도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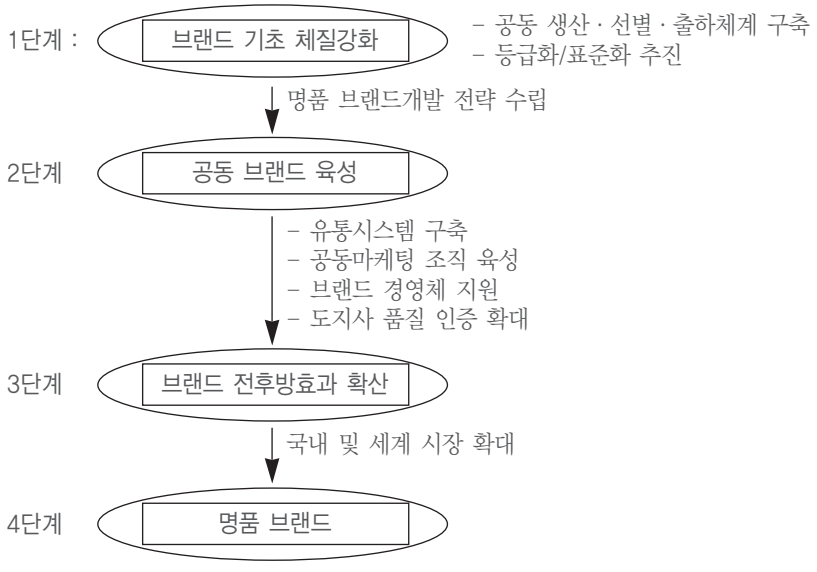
2) 단일 특화 브랜드 집중육성을 통한 명품화 추진

도 및 시·군, 농협, 농민들과 함께 합심하여 명품 브랜드를 만들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시장과도 경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 신선도 유지 등 품질 경쟁력 제고를 통한 명품 브랜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3) 농산물 수출의 확대

무엇보다도 충남 농산물 수출 1위인 인삼의 '수출주력 상품화'가 시급하며, 이미 낮은 관세로 개방되어 있고 전업화로 인해 경쟁력을 갖춘 화훼, 시설채소, 김치 등도 수출 상품화 노력이 필요하다. 충남 농산물의 대미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농업단지의 규모화 · 전문화를 도모하여 수출기반을 구축하고 수출컨설팅 실시, 전담 지도사 배치, 재배지 검역서비스 제공, 물류비와 인센티브 지원 등의 사후관리를 선별적으로 지원한다. 둘째, 해외시장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시키고 국제 농산물박람회나 식품전시회 등의 참가방식을 개선하여 충남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한다. 셋째, 산지



[그림 1] 도내 농산물 명품 브랜드 구축 단계

의 예냉 · 선별 · 포장 · 수송 등 수출물류 시스템을 일관적으로 연계하여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넷째, 농산물 수출지원을 위한 금융관련 제도인 농산물 수출보험, 관세환급, 자조금 제도 등을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끝으로, 농산물 수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전문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4) 과수, 축산 등 피해부문의 지원

한 · 칠 FTA체결 이후 과수부문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책은 마련되어 있으나, 식량작물이나 축산부문에 대해서는 관련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품목 중심의 개별적, 임시방편적 지원에 불과하므로 도 차원에서 과수 및 축산부문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의 도입을 중앙정부에게 건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 축산 및 과수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군과 품목에 대해서 도차원의 별도대책을 강구해 둘 필요가 있다. 다만, 재정지원은 무분별한 지원보다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품목별 경쟁력 강화

콩, 보리 등 경쟁력이 낮은 품목은 대체작목으로 전환하고,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부문은 품질고급화 및 차별화를 통해 안정적인 국내산 존립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구체적인 품목별 경쟁력 강화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쇠고기는 우수브랜드 육성 및 고급육 생산기술의 확대를 통해 품질고급화를 꾀함과 동시에 쇠고기 이력추적사업을 통해 수입산과 차별화시켜야 한다. 둘째, 돼지는 환 · 배기 및 분뇨처리시설의 현대화 및 자연순환농업 정착으로 친환경축산기반을 구축하여 질병억제와 생산성향상을 병행한다. 셋째, 닭, 오리는 포장 시 작업장 명칭을 표시하고 사육단계에서 HACCP를 도입하는 등 유통체계 개선으로 신선도와 위생수준을 향상시켜야한다. 넷째, 낙농은 조사료 유통시설지원 등 생산기반을 확대시켜 생산성 향상 및 관리비를 절감을 도모한다. 다섯째, 과실류는 당도 표시기준 마련과 생산 · 재배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품질경쟁력을 제고한다. 여섯째, 채소류는 우수브랜드 경영체를 중심으로 우량품종 보급과 계약재배 확대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추구한다. 일곱째, 곡물, 임산물 등은 생산우수단지를 중심으로 생산, 가공, 유통을 담당할 브랜드 경영체를 육성함과 동시에 친환경 · 안전 임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을 개발 · 보급한다.

끝으로 인삼은 미국산 화기삼(花旗蔘)과

품질차이 때문에 수입이 급증할 우려는 적으나, 가공원료, 인삼엑기스 형태로 수입증가가 예상되므로 생산, 유통계열 확대, 지리적 표시제 도입, 안전성 확보 등을 통해 국내수요 기반을 확충하고, 현대화된 수출전문단지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표 9〉 품목별 경쟁력 제고방안

품 목		대 책
축산	쇠 고 기	• 안전한 고급육 생산기술 확대로 품질향상 도모 • 충남도 자체브랜드인 '토바우(Tobawoo)'의 브랜드 파워강화 • 모든 한우에 이력추적제 적용
	돼 지	• 시설현대화(질병감염 및 폐사율을 억제) • 자연순환형 친환경 축산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닭 · 오 리	• HACCP 도입 – 생산·유통·소비 전단계에 걸쳐 신선도 및 위생수준 향상 – 소비자 신뢰도 제고
원예	과 실 류	• 생산·재배시설의 현대화 품질경쟁력을 제고 – 사과(키 낮은 사과원), 배·복숭아(밀식과원), 포도(비가림시설) 확대 • 수출형 전업농 육성 및 수출전문단지 조성
	채 소 류	• 신품종·기술개발 및 생산·유통시설의 현대화 – 고추는 기계화에 적합한 신품종 개발 – 마늘은 종구 갱신율 향상 • 대단위 주산단지 조성 및 산지유통시스템 구축
	인 삼	• 생산 · 유통계열 확대, 지리적 표시제도입, 안정성 확보 • 신품종 개발 및 생산·유통시설이 현대화된 수출전문단지조성
곡물 · 임산물	콩 · 감 자	• 생산우수단지 조성 및 브랜드 경영체 육성
	호 두 · 밤	• 생산기반 정비추진 및 친환경·안전임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

참 고 문 헌

권용대, 한 · 미 FTA 협상이후 충남농업의 과제, 충남발전연구원 정책포럼, 2007.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각년도.
박경 · 신동호, 한 · 미 FTA에 따른 충남지역경제 효과와 대책, 충남발전연구원, 2006.
산업자원부, 한 · 미 FTA의 산업영향 평가 및 발전전략, 2007.
신동호, 한 · 미 FTA가 충남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2007.
이정환, 한 · 미 FTA의 영향과 대책의 방향, GSnj Report. 2007.
외교통상부, 한 · 미 FTA 분야별 최종협상결과, 2007.
재정경제부, 한 · 미 FTA 타결에 따른 영향 및 기대효과, 2007.
정부 각 부처, 한 · 미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국회 한 · 미 FTA특위 보고자료, 2007.